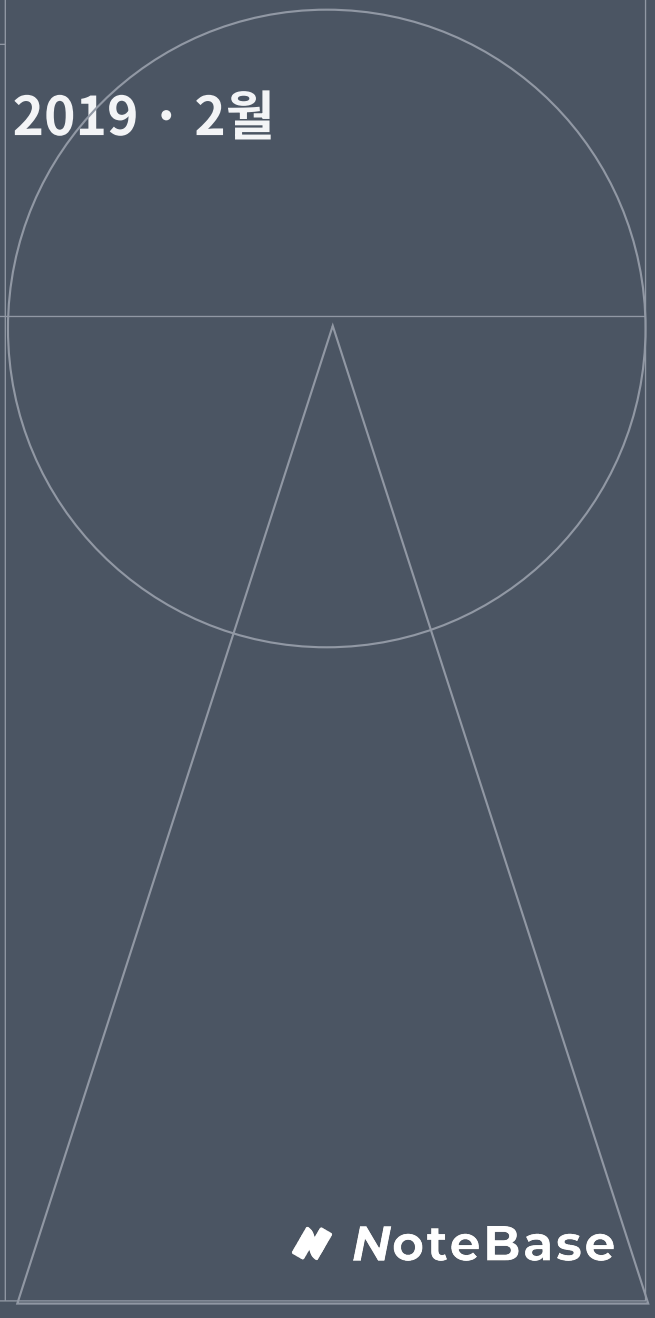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19 · 2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19 · 2월

공무원/서울시/9급 · 사회 · 2019 · 2월

문 1. <보기>는 자료수집방법 A~D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보기>

구분		조작적 정의의 과정을 거치는 연구방법에서 주로 쓰는가?	
		예	아니오
(가)	예	A	B
	아니오	C	D

① (가)가 '조사대상자와 연구자 간 신뢰관계가 중요한가?'라면, B는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

② (가)가 '연구자가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현지에 가서 연구해야 하는가?'라면 A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

③ (가)가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면 B는 면대면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

④ (가)가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인가?'라면 D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연구대상의 행동을 관찰하는 자료수집방법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D는 조작적 정의를 거치는 연구에 주로 쓰이지 않고, 언어적 상호 작용도 필수적이지 않은 방법이다. 이는 연구대상의 일상생활에 참여하여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참여 관찰법**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를 거치는 양적 연구에는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주로 쓰이므로 A·C는 이 두 방법 중 하나이다. B·D는 질적 연구에 주로 쓰이는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또한 표에서 A·B는 (가)에 '예', C·D는 '아니요'로 응답한다.

① X: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방법은 **실험법**이다. 실험법은 조작적 정의를 거치는 양적 연구에 주로 쓰이므로 표의 A·C 쪽에 속한다. 따라서 (가)에 신뢰 관계에 관한 질문을 넣더라도, 오른쪽 열의 B를 실험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② X: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기에 적합한 방법은 질문지법이다. 그러나 질문지법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도 실시할 수 있어 **연구자가 현지에 직접 가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다**. 따라서 현지 방문이 필요한지를 묻는 (가)에 '예'로 응답하는 A를 질문지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 연구 대상의 생활 현장에 들어가 관찰하는 것은 참여 관찰법의 특징이다.

③ X: 면대면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면접법이다. 면접법은 연구자와 대상자가 만나 대화해야 하므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가)가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여기에 '예'로 응답하는 B를 면접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④ O: 질문지법은 문항을 읽고 응답하는 문자 언어를, 면접법은 대화를 이용하므로 두 방법 모두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가)에 이 질문을 넣으면 A는 질문지법, B는 면접법이 된다. 반면 실험법과 참여 관찰법은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C는 실험법, D는 참여 관찰법이다. 참여 관찰법은 **연구 대상의 일상생활에 참여하여 행동과 상황을 직접 관찰**하는 방법이므로 D에 대한 설명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며,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그러니까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일 때 60세 이상부터 평생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65세 이하는 소득 활동 정도에 따라 노령연금 혹은 조기노령연금 지급액이 바뀌는데요, 활동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55세 이상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며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② ㉡은 가입자의 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③ ㉠은 ㉡과 달리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며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④ ㉡은 ㉠과 달리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 강하고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진다. 가입자 모두가 같은 금액을 내는 방식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기초노령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노인의 소득을 보충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제시문처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므로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보편적 복지는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 없이 해당 범주의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이다.

② O: ㉡ 국민연금은 노령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 때를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정해진 상한과 하한 안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하는 보험료도 많아진다. 따라서 가입자의 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진다.

③ X: ㉠이 선별적 복지라는 부분은 맞지만, '사전 예방적인 성격'은 ㉡ 국민연금의 특징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미리 보험료를 내어 장래의 소득 상실에 대비한다. 반면 ㉠은 현재 소득이 부족한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므로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 강하다. 여기서 사전 예방은 노령 자체를 막는다는 뜻이 아니라 노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미리 대비한다는 뜻이다.

④ X: ㉡ 국민연금은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여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므로 사전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다. 또한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를 바탕으로 수급권이 형성**되므로,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가 원칙적으로 대응한다. 조세를 재원으로 지원하여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은 ㉠ 기초노령연금의 특징이다.

NoteBase

문 3. 일탈행위에 관한 <보기 1>의 이론에서 제시하는 해결 방안을 <보기 2>에서 가장 옳게 고른 것은?

<보기 1>
성인들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문제아로 규정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기 2>
ㄱ. 사회적 규범의 통제력 회복
ㄴ.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 추진
ㄷ. 타인에 대한 신중한 낙인 필요
ㄹ. 일탈자로 규정되는 과정과 일탈의 상대성을 강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학생을 '문제아'로 규정하는 주변의 반응이 일탈을 심화시킨다고 보는 **낙인 이론**이다. 일탈자로 규정되는 과정과 일탈의 상대성에 주목하므로, 타인에게 **신중하게 낙인**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보기 1>은 학교 부적응 학생을 '문제아'로 규정하는 성인들의 반응을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이는 낙인 이론의 관점이다. 낙인 이론은 일탈자로 규정된 사람이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일탈을 반복하게 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ㄱ X: 사회적 규범의 통제력 회복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에서 강조하는 해결 방안이다. 이 이론은 규범의 통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일탈이 발생한다고 보므로 규범의 정립과 통제력 회복을 중시한다. 낙인 이론에서는 규범 강화보다 일탈자로 규정하는 사회적 반응을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핵심이다.

ㄴ X: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 추진은 **차별 교제 이론**에서 강조하는 해결 방안이다. 이 이론은 일탈 집단과 교류하면서 일탈에 우호적인 가치관과 행동 방식을 학습한다고 보므로, 일탈 집단과의 접촉을 줄이고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를 늘리는 것을 중시한다. 낙인 이론은 일탈을 배우는 과정보다 타인에게 일탈자로 규정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ㄷ O: 일탈자라는 낙인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여 일탈을 반복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을 성급하게 일탈자로 규정하지 않는 **신중한 낙인**이 필요하다. 제시문의 학생들을 '문제아'로 단정하지 않고 수용하는 태도가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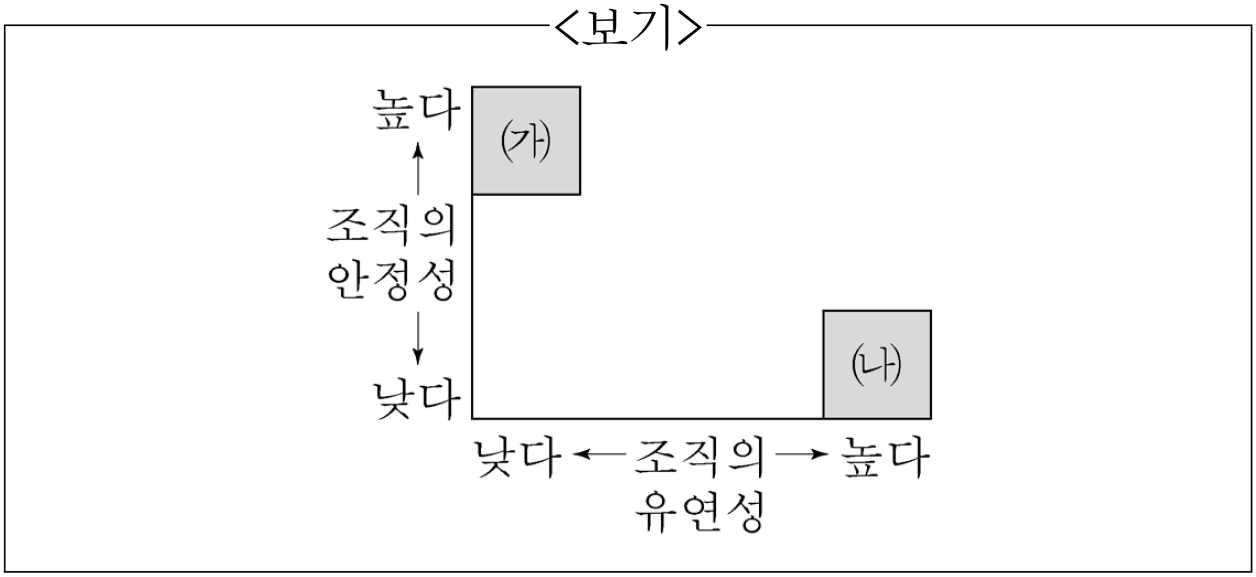
ㄹ O: 낙인 이론은 행위 자체만으로 일탈 여부가 정해진다고 보지 않고, **사회적 반응에 따라 일탈로 규정되는 과정**을 강조한다. 같은 행위도 시대와 사회 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일탈의 상대성에 주목하며, 이러한 관점은 무분별한 낙인을 경계하는 근거가 된다.

낙인 이론에 부합하는 보기는 ㄷ과 ㄹ이며, 이는 ④의 조합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4. <보기>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사회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가)와 (나)는 모두 효율성을 중요시 여긴다.

② (나)는 조직 내 지위가 권한과 책임에 따라 서열화되어 있다.

③ (가)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에 적합한 사회조직이다.

④ (나)는 (가)보다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체계가 이루어진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가)는 안정성이 높은 관료제, (나)는 유연성이 높은 탈관료제이다. 두 조직 모두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관료제는 분업과 규칙을 통해, 탈관료제는 자율성과 유연한 대응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그림에서 세로축은 위로 갈수록 조직의 안정성이 높고, 가로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직의 유연성이 높다. 안정성은 높지만 유연성은 낮은 (가)는 관료제, 안정성은 낮지만 유연성은 높은 (나)는 탈관료제에 해당한다.

① O: 관료제와 탈관료제는 모두 **조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 한다. 관료제는 전문화된 분업과 정해진 규칙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탈관료제는 구성원의 자율성과 유연한 의사결정으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② X: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지위가 서열화되는 **위계적 구조는 (가)의 관료제**를 특징짓는다. 상하 지위에 따라 명령과 보고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나)의 탈관료제는 위계성을 완화하고 권한을 분산하여 수평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을 중시한다.

③ X: (가)의 관료제는 업무를 표준화하고 반복적으로 처리하므로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에 적합하다.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생산 방식을 유연하게 바꾸어야 하는 다품종 소량생산에는 (나)의 탈관료제가 더 적합하다.

④ X: 근무 연수와 경력을 중시하는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은 (나)보다 **(가)의 관료제**에서 더 두드러진다. (나)의 탈관료제는 연공서열보다 개인의 능력과 업무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NoteBase

문 5.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는 소속 정당을 봐야 해.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정당의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나) 후보자의 소속 정당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나 품성이 중요하지. 훌륭한 인물이 대표가 되면 정당의 발전도 가능해.

① (가)의 관점은 사회의 합은 개인의 합보다 크다고 본다.
② (나)의 관점에서는 사회는 실재하며 개인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본다.
③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는 달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의식개혁에 중점을 둔다.
④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사회를 생물유기체에 비유하며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가)는 후보자가 정당의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므로 **사회 실재론**에 해당한다. 이 관점은 사회가 개인의 단순한 합을 넘어 고유한 특성과 영향력을 가진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는 정당이 후보자 개인의 행동을 제약한다고 보므로 사회 실재론에 해당한다. 사회 실재론은 사회가 **개인의 단순한 합 이상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며, 개인과 구별되는 실체로 존재한다고 본다.

② X: (나)는 개인의 능력과 품성에 따라 정당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므로 사회 명목론에 해당한다. 사회 명목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인이며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에 붙인 이름이라고 본다. 사회가 독자적으로 실재하며 개인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설명은 **(가)의 사회 실재론**에 해당한다.

③ X: 사회 실재론인 (가)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사회문제 해결의 주된 방안으로 본다. 개인의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는 것은 개인의 행위가 사회를 만든다고 보는 (나)의 사회 명목론이다.

④ X: 사회를 생물유기체에 비유하는 것은 **(가)의 사회 실재론**에 해당한다. 몸의 각 기관처럼 개인을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것은 (나)의 사회 명목론에 해당하므로, 선지는 서로 다른 관점의 특징을 섞어 설명했다.

NoteBase

문 6. <보기>의 이론에 대해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보기>
이븐 할둔(Ibn Khaldoun)은 이슬람 문명의 흥망성쇠에 관심을 갖고 여러 나라의 흥망사를 비교 설명하면서 사회 변화나 문화 현상은 유기체의 일생처럼 성장과 쇠퇴를 되풀이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과거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

② 문화 상대주의를 부정하고 서구 사회의 지배를 정당화한다.

③ 변동은 곧 진보를 의미한다고 본다.

④ 사회 발전은 변동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사회와 문화가 유기체처럼 **성장과 쇠퇴를 되풀이한다**는 설명은 순환론이다. 순환론은 역사에서 반복되는 흥망성쇠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선지별 해설

보기의 이븐 할둔은 사회와 문화가 성장한 뒤 쇠퇴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사회 변동을 흥망성쇠의 반복으로 이해하는 순환론에 해당한다.

① O: 순환론은 사회와 문명의 성장·쇠퇴가 반복된다고 보므로, 과거 역사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 보기에서 여러 나라의 흥망사를 비교한 것도 이러한 반복 양상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② X: 문화 간 우열을 인정하고 서구 사회의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은 **서구 중심의 진화론**에 해당한다. 서구 사회를 발전의 기준으로 삼아 비서구 사회를 뒤처진 단계로 평가하면, 각 문화를 고유한 맥락에서 이해하는 문화 상대주의와 어긋난다. 순환론의 핵심은 서구의 우월성이 아니라 사회와 문명의 성장·쇠퇴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③ X: 사회 변동을 곧 진보로 보는 것은 진화론의 관점이다. 순환론은 변동에 **성장뿐 아니라 쇠퇴도 포함된다**고 보므로, 모든 변동이 더 나은 상태로의 발전을 뜻하지는 않는다.

④ X: 사회마다 변동 속도에는 차이가 있어도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보는 것은 진화론이다. 순환론은 모든 사회가 하나의 발전 방향을 따른다고 보기보다 **성장과 쇠퇴의 과정이 반복된다**고 본다.

NoteBase

문 7.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甲)은 A주택의 소유자이다.
· 갑(甲) - 2017년 2월 15일 A주택에 대해 B은행에 3억 원 근저당을 설정함.
· 갑(甲) - 2017년 10월 2일 A주택에 대해 을(乙)과 2억 원에 전세 계약을 함.
· 을(乙) - 2017년 12월 2일 A주택에 입주하고 전입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음.
· 갑(甲) - 2018년 1월 10일 A주택에 대해 C은행에 2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함.

① 을(乙)의 A주택 전입신고 기록은 등기부 등본 갑구에 기록된다.
② A주택 등기부 등본 을구에는 B은행과 C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③ A주택이 경매될 경우 을(乙)은 B은행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④ 갑(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B은행은 A주택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근저당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므로 등기부의 **을구**에 기록된다. 따라서 A주택의 을구에서 B은행과 C은행의 근저당권을 확인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긴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주민등록표**에 기록된다. 등기부 갑구에는 소유권 보존·이전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므로 을의 전입신고 기록이 갑구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다.

② O: 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기부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근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이므로, 2017년 2월 15일 설정된 B은행의 근저당권과 2018년 1월 10일 설정된 C은행의 근저당권은 모두 A주택의 을구에 기록된다.

③ X: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2항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을은 2017년 12월 2일 입주·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으므로 다음 날인 12월 3일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B은행의 근저당권은 그보다 앞선 2017년 2월 15일 설정되었으므로 **B은행이 을보다 우선**한다. 을은 이후인 2018년 1월 10일 근저당권을 설정한 C은행보다 우선한다. 2017년 10월 2일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④ X: 민법 제356조에 따른 저당권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그 부동산의 교환가치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 따라서 갑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B은행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근저당권만으로 A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할 권리는 없다**.

NoteBase

문 8. <보기>에 제시된 헌법 조항에 나타난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6조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① 국민주권의 원리
② 대의제의 원리
③ 권력분립의 원리
④ 지방 자치의 원리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지방 자치는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의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원리이다. 제시된 조항에는 국민의 주권, 대표자 선출, 국가 권력의 분담이 나타나지만 지방 자치에 관한 내용은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국민주권은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제1조 제2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국가 권력의 근원이 국민**임을 밝힌다.

② O: 대의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방식이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이 선거로 국회의원을 뽑고, 제40조에 따라 이들로 구성된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므로 **선출된 대표자를 통한 정치**가 나타난다.

③ O: 권력분립은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나누어 맡겨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는 원리이다. 제40조는 입법권을 국회에,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을 정부에,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한다. 이는 **입법·행정·사법 권력을 서로 다른 기관에 배분**한 것이다.

④ X: 지방 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역의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원리이다. 제시된 조항은 국가 권력의 근원과 국가기관의 구성·권한을 정한 것으로, **지역 주민의 자치에 관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지방 자치 자체가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가 아닌 것이 아니라, 제시문에 나타난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NoteBase

문 9. <보기>는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가)~(라)의 현상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을 때 갑(甲)국 국민의 생활 모습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제시된 것 외에 다른 경제적 요인에는 변화가 없으며, 모든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보기>
(가)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지난해의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나) 국내 조류 독감 파동으로 달걀과 달걀 가공품의 수입이 지난해보다 5배 증가하였다.
(다) 한류의 영향으로 문화 예술 저작권의 해외 판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라) 국민 총소득의 감소로 해외 상품에 대한 1인당 지출이 감소하였다.

① (가), (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일시적으로 개선된다.
② (나), (다)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우리 정부의 외채 상환 부담을 증가시킨다.
③ (다), (라)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진다.
④ (가)와 (다)는 외환의 공급 측면에, (나)와 (라)는 외환의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나)의 수입 증가는 달러 수요를 늘리고, (다)의 저작권 해외 판매 증가는 달러 공급을 늘린다. 두 변화는 환율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상대적 크기를 모르면 환율과 달러 표시 외채의 원화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원/달러 환율은 1달러와 교환되는 원화의 금액이다. 달러 공급 감소나 수요 증가는 환율 상승 요인이고, 달러 공급 증가나 수요 감소는 환율 하락 요인이다.

① O: (가)의 외국인 국내 투자 감소는 달러 공급을 줄이고, (나)의 수입 증가는 달러 수요를 늘린다. 두 변화 모두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킨다. 일반적인 환율 효과 모형에서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낮아지고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높아져,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를 통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이 선지의 개선은 이러한 기본 모형에 따른 판단이다. 수출입이 가격 변화에 반응한다는 전제가 있으며, 실제 환율 변동 직후에도 경상수지가 반드시 개선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② X: (나)는 달러 수요 증가로 환율을 올리는 반면, (다)는 저작권 판매대금의 유입으로 달러 공급을 늘려 환율을 내린다. **수요와 공급 증가의 상대적 크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환율의 변화 방향을 확정할 수 없다. 달러 표시 외채의 규모가 같다면 환율이 오를 때 상환에 필요한 원화가 늘어나고, 환율이 내릴 때는 줄어든다. 따라서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증감은 두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고쳐야 한다.

③ O: (다)의 저작권 해외 판매 증가는 달러 공급을 늘리고, (라)의 해외 상품 지출 감소는 달러 수요를 줄인다. 두 변화 모두 원/달러 환율을 낮춰 원화 가치를 높인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같은 원화 가격의 재화를 사는 데 필요한 달러가 많아지므로, 미국에 수출하는 재화의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하여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

④ O: 외국인의 국내 투자와 저작권의 해외 판매는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는 거래이므로 **외환 공급 요인**이다. 따라서 (가)는 공급 감소, (다)는 공급 증가에 해당한다. 상품 수입과 해외 상품에 대한 지출은 대금 지급을 위해 달러가 필요한 거래이므로 **외환 수요 요인**이다. 따라서 (나)는 수요 증가, (라)는 수요 감소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0. <보기>에서 국제 관습법으로 가장 옳게 묶인 것은?

<보기>
ㄱ. 신법 우선의 원칙
ㄴ. 외교관 면책 특권
ㄷ.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ㄹ.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외교관 면책 특권과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은 국가 간 관행이 **법적 의무로 인정되어 형성된 국제 관습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국제 관습법은 국가들의 일반적 관행과 이를 법적 의무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결합하여 성립한다. 법의 일반 원칙은 각국 법체계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기본 원칙으로, 국제법에도 적용된다.

ㄱ. 신법 우선의 원칙 — 법의 일반 원칙: 같은 효력의 법이 같은 사항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제정된 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법규범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법 원칙에 해당한다.

ㄴ. 외교관 면책 특권 — 국제 관습법: 외교관이 주재국에서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주재국의 재판권 등으로부터 일정한 면제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국가 간 외교 관행이 법적 의무로 인정되어 형성되었으며, 이후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도 성문화되었다. 조약에 규정되었다고 **기존의 관습법적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ㄷ.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 국제 관습법: 다른 국가가 주권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정치·경제 체제 등의 문제에 **강제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는 국가 간 관행과 법적 확신에 기초한다.

ㄹ.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 법의 일반 원칙: 형식상 권리 행사라도 권리의 본래 목적과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각국 국내법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며, 국제법에서도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기본 원칙으로 적용된다.

국제 관습법의 예로 묶이는 것은 ㄴ과 ㄷ이며, 이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1. <보기>의 (가)~(다) 제도가 공통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생계 곤란 가구에 최저 생계비 지원
(나) 집행유예 중인 자에게도 선거권 부여
(다)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 : 1까지로 제한

①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②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③ 가장 고전적인 권리로서 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④ 신분, 성별, 재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선거 참여 기회와 투표 가치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세 제도는 공통적으로 **평등권**과 관련된다. 평등권은 신분·성별·재산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선지별 해설

(가)의 최저 생계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여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 (나)는 집행유예 중이라는 이유로 선거 참여에서 배제되는 차별을 해소한다. (다)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 : 1까지로 제한하여 거주 선거구에 따라 한 표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달라지는 것을 막는다. 세 제도의 공통된 취지는 평등권 보장이다.

① X: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라는 설명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재판 청구권처럼 기본권의 실현이나 침해 구제를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이다. 세 제도가 공통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은 평등권이다.

② X: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가)는 사회권 보장과도 관련되지만, (나)와 (다)까지 포함하는 공통된 취지는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다.

③ X: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방어적 성격의 고전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신체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시된 세 제도의 공통점은 국가의 간섭 배제보다 평등의 실현에 있다.

④ O: 평등권은 신분·성별·재산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모든 사람을 언제나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처지의 차이를 고려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이며, (나)와 (다)도 선거에서의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을 줄인다.

NoteBase

문 12.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甲, 20세)은 A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한 지 1년이 넘었다. 팀장이 바뀌면서 인사 평가 점수가 낮으니 회계 담당이던 갑(甲)에게 영업 업무까지 맡으라고 강요했다. 제안을 거절하면 정직원 전환이 안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억지로 일을 맡게 되었다. 그 후 갑(甲)은 영업 실적이 부족하고 업무 수행이 태만하다는 이유로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① A사의 해고 처분은 사유는 부당하나 절차상 하자는 없다.

② 갑(甲)은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③ A사의 노동조합은 갑(甲)에 대한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A사를 제소할 수 있다.

④ 갑(甲)이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와 법원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서로 별개의 제도**이다. 갑은 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A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순한 문자 메시지 통보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서면통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례에서 A사는 갑에게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볼 수 없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해고 절차의 적법성은 각각 충족해야 한다.

② O: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적 절차이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이다. 두 제도는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은 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A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③ X: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주체는 **해고를 당한 근로자 본인**이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갑이 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노동조합이 자기 명의로 갑의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사례에는 그러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④ X: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그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불복은 민사소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아니라 A사가 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NoteBase

문 13. <보기>의 밑줄 친 ①~④ 중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발표 학생: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법률 개정 절차입니다.
우리나라는 ①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② 발의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국회의장에게 제출되고, 국회의장이 문제가 있는지 검토 후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체계 등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법제 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③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④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된 법률안은 이의서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재상정됩니다.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일반적인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 요건은 전체 재적의원을, 찬성 요건은 실제 출석한 의원을 기준으로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헌법 제52조에 따라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의원과 정부**이다. 국회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으므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의 제출 주체도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정부이다.

② X: 법률안은 먼저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국회법 제81조 제1항과 제86조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는 국회의장에게 제출 →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이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내용을 심사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 체계와 문구를 심사하므로, 상임위원회 검토 후 국회의장이 내용상 문제를 심사하는 절차로 설명하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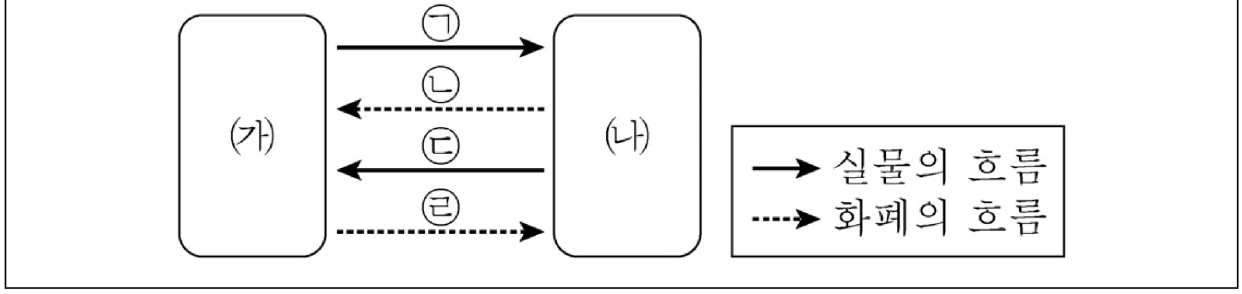
③ O: 헌법 제49조는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일반적인 법률안의 의결에도 이 요건이 적용된다. 재적의원은 현재 의원직을 가진 전체 의원이고, 출석의원은 회의에 실제 출석한 의원이므로 두 과반수의 기준이 다르다.

④ X: 대통령은 이송받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의는 **이의서를 반영해 수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원래 법률안을 다시 의결하는 절차**이다. 헌법 제53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만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을 법률로 확정한다.

NoteBase

문 14. <보기>는 민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민간 경제 주체에 해당한다.)

<보기>



① (가)가 가계이면, ㉠은 재화이다.

② (나)가 기업이면, ㉡은 서비스의 대가이다.

③ ㉢이 생산요소이면, (가)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이 생산요소의 대가이면, (나)는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이 생산요소이면 이를 공급하는 (나)는 가계이고, 제공받는 (가)는 기업이다. 기업은 생산요소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며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그림에서 실선은 실물, 점선은 화폐의 흐름이다. 가계는 기업에 노동·토지·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기업은 가계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판매 대금을 받으므로, 실물과 그 대가인 화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① X: (가)가 가계이면 (나)는 기업이다. ㉠은 가계에서 기업으로 향하는 실물의 흐름이므로 **생산요소**이다. 재화는 기업인 (나)에서 가계인 (가)로 향하는 ㉢에 해당한다.

② X: (나)가 기업이면 (가)는 가계이다. ㉡은 기업에서 가계로 지급하는 화폐이므로 임금·지대·이자 등 **생산요소의 대가**이다.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대금은 가계에서 기업으로 향하는 ㉣이다.

③ O: ㉢은 (나)에서 (가)로 향하는 실물의 흐름이다. 이것이 생산요소이면 (나)는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가계이고, (가)는 이를 수요하는 기업이다. 기업은 생산요소를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며,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이윤을 극대화**하려 한다.

④ X: ㉣은 (가)에서 (나)로 향하는 화폐의 흐름이다. 이것이 생산요소의 대가이면 지급하는 (가)는 기업, 받는 (나)는 가계이다. 가계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므로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이며, 공급자는 기업이다.

NoteBase

문 15. <보기>는 생산측면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한 A재의 시장 상황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단위 : 개, 원)

<사회적 최적수준>

사회적 최적 생산량	80
최적 가격	100

<현재 시장 균형>

시장 균형 생산량	50
시장 균형 가격	㉠

① ㉠은 100보다 작다.

② 외부 불경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③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④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시장 생산량이 50개로 사회적 최적 생산량 80개보다 적으므로 생산의 **외부 경제**가 발생한 상황이다.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생산이 늘어나 **과소 생산을 개선**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표에서 현재 시장 균형 생산량은 50개이고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80개이다. 일반적인 우하향 수요 곡선에서는 거래량이 적을수록 소비자가 지불하려는 가격이 높다. 따라서 50개일 때의 시장 균형 가격 ㉠은 80개일 때의 최적 가격 100원보다 **크다**.

② X: 시장 생산량 50개가 사회적 최적 생산량 80개보다 적으므로 **외부 경제**가 발생한 상황이다. 생산 활동이 제삼자에게 이익을 주지만 생산자가 그 이익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생산자는 사회 전체에 이로운 수준보다 적게 생산한다. 생산의 외부 불경제라면 제삼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생산자의 의사 결정에 반영되지 않아 과다 생산이 발생한다.

③ X: 생산의 외부 경제에서는 제삼자에게 돌아가는 외부 편익을 고려하므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다**.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에서 외부 편익을 뺀 값이다.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은 것은 생산 과정에서 제삼자에게 피해를 주는 외부 불경제의 경우이다.

④ O: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생산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낮아져 생산을 늘릴 유인이 생긴다. 이를 통해 현재 50개인 생산량을 사회적 최적 생산량 80개에 가까워지게 하여 **과소 생산에 따른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

NoteBase

문 16.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甲), 을(乙)국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 비탄력적 중 하나이다.)

<보기>

A제품에 대한 국가별 시장 조사 결과

구분	갑(甲)국	을(乙)국
현재 판매량	1,000개	500개
원화로 환산한 현재 가격	1만원	1만원
필수재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비율	높다	낮다
가계의 소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작다	크다

① A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갑(甲)국에서는 가격을 내리는 전략을 통해 기업의 판매 수입을 극대화할 것이다.

② 을(乙)국에서 A제품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보다 크고 1보단 작을 것이다.

③ A제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갑(甲)국의 수요량은 을(乙)국의 수요량보다 덜 민감하게 나타난다.

④ A제품은 을(乙)국보다 갑(甲)국에서 대체재가 더 많을 것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갑국은 A제품을 필수재로 보는 소비자 비율이 높고 소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을국은 반대 조건이므로 탄력적이며,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반응은 **갑국이 을국보다 작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 변화율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며, 보통 절댓값으로 비교한다.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표에서 갑국은 A제품을 필수재로 인식하는 소비자 비율이 높고 소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꼭 필요한 상품이고 가격이 올라도 가계 부담 증가가 상대적으로 작아 구매량을 크게 줄이지 않는 것이다. 을국은 그 반대 조건이다. 두 나라의 수요가 탄력적 또는 비탄력적이라는 조건에 따라 갑국은 비탄력적, 을국은 탄력적으로 판단한다.

① X: 판매 수입은 가격에 판매량을 곱한 값이다. 갑국처럼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가격을 내릴 때 판매량의 증가율이 가격의 하락률보다 작아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따라서 가격 인하로 판매 수입을 극대화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으며, 수요가 비탄력적인 범위에서는 **가격을 올리면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② X: 을국은 필수재로 인식하는 소비자 비율이 낮고 소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수요는 탄력적이며, 가격탄력성은 0과 1 사이가 아니라 **1보다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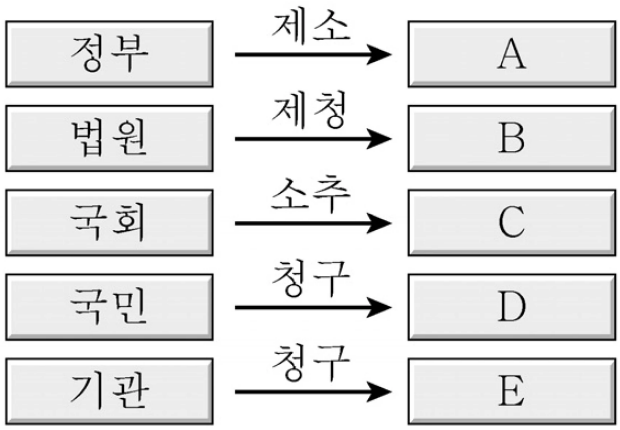
③ O: 갑국은 비탄력적이므로 수요량 변화율의 크기가 가격 변화율의 크기보다 작고, 을국은 탄력적이므로 그보다 크다. 같은 비율의 가격 변화에 대해 **갑국의 수요량 변화율이 을국보다 작으므로** 갑국의 수요량이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는 현재 판매량 1,000개와 500개라는 절대 수량을 비교한 결론이 아니다.

④ X: 다른 조건이 같다면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는 더 탄력적**이다. 가격이 오르면 다른 상품으로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갑국은 을국보다 수요가 덜 탄력적이므로 갑국에 대체재가 더 많다는 분석은 이러한 관계와 맞지 않는다. 다만 표에는 대체재 수가 직접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대체재 수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NoteBase

문 17. <보기>의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D의 경우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 있다.

② C의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③ A, B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헌법 재판관 6명 이상의 출석과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E에 해당하는 것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도표에서 국민이 청구하는 D는 **헌법소원심판**이다. 공권력으로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는 '권리구제형'과,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했을 때 당사자가 청구하는 '위헌심사형'이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D는 국민이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의 **위헌심사형**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을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다.

② X: C는 국회가 소추하는 탄핵심판이다. 탄핵결정은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는 것이며,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헌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 공직에서 물러나는 책임과 손해배상·형벌 등의 책임은 별개이다.

③ X: A는 정부가 제소하는 정당해산심판이고, B는 법원이 제청하는 위헌법률심판이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심리 정족수는 원칙적으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다. 헌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A의 정당해산결정과 B의 법률 위헌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지의 '6명 이상 출석, 5명 이상 찬성'은 두 정족수를 모두 잘못 설명한 것이다.

④ X: E는 기관이 청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이다.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나 범위를 다투는 경우를 심판한다(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됨을 이유로 정부가 청구하는 정당해산심판은 A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8. <보기>는 갑(甲)국의 경상수지 자료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국제 거래는 갑국과 을국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다.)

<보기>

(단위 : 억 달러)

	2017년	2018년
상품수지	30	20
서비스수지	−20	−30
본원소득수지	−15	10
이전소득수지	10	−5

① 2018년 갑(甲)국의 상품 수출액은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② 2018년 경상수지는 을(乙)국 화폐 대비 갑(甲)국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요인이다.

③ 2017년과 달리 2018년 갑(甲)국의 경상수지는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는 요인이다.

④ 2018년 경상수지는 갑(甲)국에서는 물가 하락을, 을(乙)국에서는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2018년 갑국은 경상수지가 **5억 달러 적자**이고, 갑국과만 거래하는 을국은 같은 금액의 흑자이다. 외화의 순유출입에 따른 통화량 변화는 갑국에서 **물가 하락**, 을국에서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수지를 합한 값이다. 표의 단위는 억 달러이므로, 갑국의 2017년 경상수지는 30 − 20 − 15 + 10 = 5억 달러로 흑자이고, 2018년은 20 − 30 + 10 − 5 = −5억 달러로 적자이다.

① X: 상품수지는 상품 수출액에서 상품 수입액을 뺀 값이다. 표에서 확인되는 것은 **상품수지 흑자가 3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줄었다**는 사실이다. 수출액이 그대로이거나 증가해도 수입액이 더 크게 증가하면 흑자 규모가 줄 수 있으므로, 상품 수출액이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X: 2018년 갑국의 경상수지는 적자이므로 외화 지급액이 수취액보다 많다. 이는 외환시장에서 외화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는 요인으로, 을국 화폐의 가치는 높이고 **갑국 화폐의 가치는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③ X: 경상수지 흑자는 외화가 순유입되어 외환 보유액을 늘리는 요인이고, 적자는 외화가 순유출되어 외환 보유액을 줄이는 요인이다. 갑국은 2017년에 흑자, 2018년에 적자였으므로 외환 보유액의 증가 요인이 된 해는 **2018년이 아니라 2017년**이다.

④ O: 갑국과 을국 사이에서만 거래하므로, 2018년 갑국의 5억 달러 적자는 을국의 5억 달러 흑자에 대응한다. 갑국에서는 외화가 순유출되고 외화 매입에 자국 화폐가 사용되어 국내 통화량이 줄어드는 요인이 된다. 반대로 을국에서는 순유입된 외화를 자국 화폐로 환전하는 과정이 국내 통화량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통화량 변화는 **갑국의 물가를 낮추고 을국의 물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NoteBase

문 19. <보기 1>의 밑줄 친 ㉠, ㉡ 기관이 추진할 정책에 대한 내용을 가장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정부가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소비가 더디게 회복되고 고용 증가세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여러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보기 2>
ㄱ. ㉠은 세율을 인하하여 가계의 처분가능 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다.
ㄴ. ㉡은 채권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할 것이다.
ㄷ. ㉠과 ㉡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ㄹ. ㉠은 통화 정책, ㉡은 재정 정책으로 경기 안정화에 나설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소비 회복이 더디고 고용 증가세가 악화될 때는 **총수요를 늘리는 확대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한다.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입**은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여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수단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보기 1>은 소비와 고용이 부진한 상황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 전체의 재화·서비스에 대한 수요인 총수요를 늘려 생산과 고용의 회복을 유도하는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ㄱ. X: 세율을 인하하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가계가 내는 세금이 줄어 **처분가능 소득은 증가한다**. 처분가능 소득은 가계가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소득이다. 따라서 세율 인하는 소비를 촉진하는 확대 재정 정책이며, 처분가능 소득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ㄴ. O: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하면 매입 대금이 지급되어 **시중에 자금이 공급된다**. 이는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 하락을 유도하여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확대 통화 정책이다.

ㄷ. O: 소비와 고용의 부진에 대응하려면 두 기관 모두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감세나 정부 지출 증가로,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 확대로 소비와 투자 등의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ㄹ. X: 정책의 담당 기관을 서로 바꾸어 설명하였다. **정부는 재정 정책**으로 조세와 정부 지출을 조절하고,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으로 통화량과 금리에 영향을 미쳐 경기를 안정시킨다.

옳은 보기는 ㄴ, ㄷ이며, 이를 묶은 선택지는 ③이다.

NoteBase

문 20. <보기>에 해당하는 경제적 유인과 성격이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19세기 영국에서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을 호주로 유배를 보내는 것이 관례였는데, 호송 도중 죄수들이 사망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영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 범죄자의 수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이송이 끝났을 때까지 살아남은 죄수들의 수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후 호송 도중 죄수들이 사망하는 문제는 크게 줄어들었다.

① 특허권
② 환경 오염세
③ 쓰레기 종량제
④ 전력 요금 누진제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호송업자가 죄수들을 무사히 도착시킬수록 더 많은 돈을 받도록 한 것은 **경제적 이익을 주어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긍정적 유인**이다. 특허권도 발명으로 얻을 이익을 보장하여 발명을 장려한다.

공통 해설

경제적 유인은 행동에 따른 이익이나 비용을 바꾸어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중 긍정적 유인은 경제적 이익을 주어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고, 부정적 유인은 경제적 부담을 주어 특정 행동을 억제한다.

보기에서는 보수의 기준을 출발할 때의 이송 범죄자 수에서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은 죄수 수**로 바꾸었다. 이제 죄수의 생존을 위해 노력할수록 호송업자가 받는 보수가 늘어나므로, 죄수를 더 잘 돌볼 경제적 동기가 생긴다. 이는 긍정적 유인이다.

특허권은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발명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기대하게 하여 발명 활동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보기와 같은 긍정적 유인이다.

반면 환경 오염세는 오염 배출에,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 전력 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더 높은 요금률을 적용하여 전력의 추가 사용에 따르는 부담을 높인다. 이들은 **비용 부담을 통해 행동을 줄이려는 부정적 유인**이라는 점에서 보기와 구별된다.

NoteBase